



2017 세재개편 평가 및 세재개편 방향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Contents

01. 2017 세제 개편안

- 주요 내용
- 평가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 주요 현안
- 조세개편 방안

01. 2017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01. 2017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인상

/ 소득세 세율 인상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01. 2017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세율 인상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2억원 이하	10%	(좌동)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25%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 자산과세 강화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 인상

- 과표 3억원 초과분 : 20% → 25%
- 대주주 범위 단계적 확대 (예정) : 보유액 3억원 초과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 9% 저율 원천징수 및 5% 세액공제

/ 금융소득 조세혜택 축소

- 장기채권,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폐지
- 해외주식펀드 수익 비과세 일몰종료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증여세액 : 차감 거래비율, 주식 보유비율 등 조정
- 과세대상 : 거래비율 조정 및 금액기준 신설

/ 사업상속 지원제도 축소

- 사업영위기간 기준 확대 등

□ 세입 확충 및 감면 축소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 kg당 6원 인상

/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 증가분 유지, 당기분 축소

/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축소

/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 정부업무 대상,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저세율 과세 폐지

- 농수협 등 조합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 일반과세

□ 일자리 및 복지 지원

/ 고용증대세제 신설

-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없어도 고용지원하도록 개선
- 1인당 300 ~ 1,000만원

/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 중소기업 임금증가분 세액공제를 상향조정

/ 근로장려금 10%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10% → 12%

증세 규모

주요 변화요인

주요 증가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주요 감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01. 2017 세제 개편안

평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로 의미 있는 세제개편으로 평가함

- 2017년 세수효과 : 연간 5.5조원
- 2016년 세수효과 : 연간 3,171억원

전년대비 기준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 억원)

	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제	54,651	9,223	51,622	Δ4,556	Δ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Δ631	1,214
법인세	35,599	Δ341	33,773	Δ5,572	Δ2,261	-
부가가치세	Δ369	Δ493	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임

- 전체 재원소요액 178조원의 약 12.4% 수준에 불과

국정과제 소요재원과 조달 (단위 : 조원)

지출 소요 내역		재원 대책	
확정 분	135.1	세입 확충	82.6
- 예산	88.5	- 세 금	77.6
		• 초과세수	60.5
		• 비과세 정비 등	17.1
- 기금	46.6	- 세외수입	5.0
미확정 분	16.4	세출 절감	95.4
지방 지원분	25.5	- 지출 구조조정	60.2
		- 영유자금 활용	35.2

일부 재원조달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임

- 지출 구조조정으로 60.2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짐
 -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현재에도 구체적인 대상은 없는 상태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여유자금 활용은 항구적 재원계획으로 볼 수 없음
- 초과세수는 최근 세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불확실한 부문에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것은 문제임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완결된 세제개편이 아니라는 비판 가능성

- 향후에도 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함
- 국정기획위원회안의 재원 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임
 - 없는 세입 증대 항목이 이미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증세 또는 감면 감축 등으로 조달하려는 세수 증대 규모를 초과한 상태

세 부담의 형평성(재분배)

재분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 대규모 주식 보유자의 조세 부담 증가

조세를 복지의 재원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OECD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음
 - 지니계수 : 0.3 (우리나라) vs 0.32 (OECD 평균)
 - 중간소득 50% 이하 인구비율 : 14.6 (우리나라) vs 11.25 (OECD 평균)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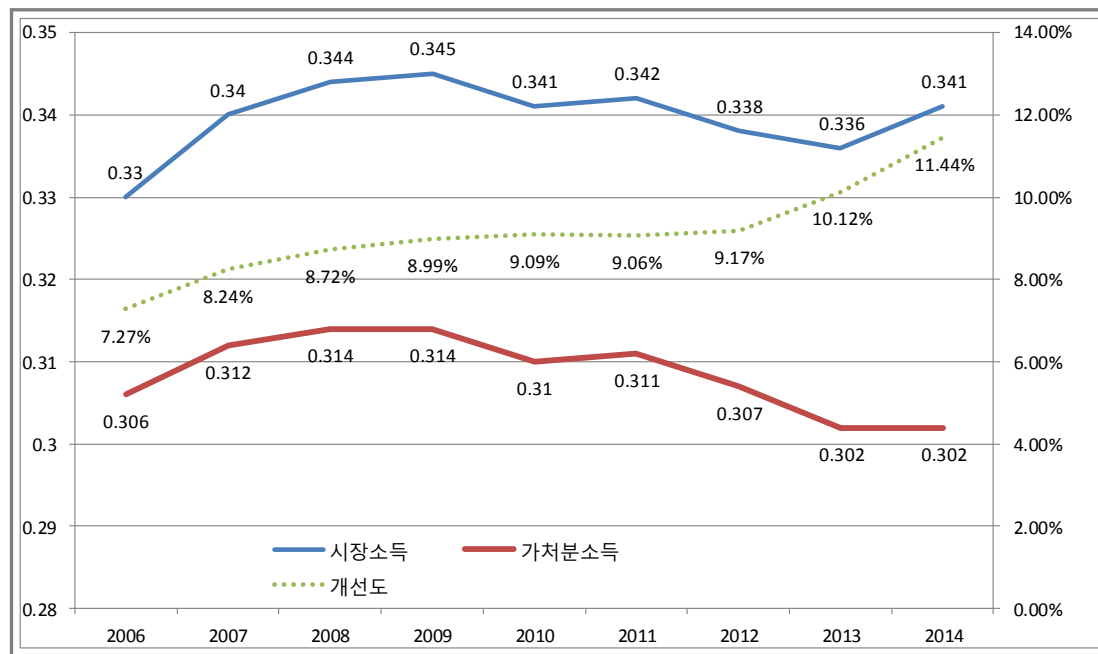
01. 2017 세제 개편안

참 조

정부의 재분배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

- 소득분배의 개선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현물급여를 제외한다면 정부의 재분배가 강화되고 있음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단위 : %)



OECD DB

$$\text{소득분배의 개선도} = \frac{(\text{시장소득 지니계수} - \text{가처분소득 지니계수})}{\text{시장소득 지니계수}}$$

기타

/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알기 어렵지만 정부가 고용에 관심이 있음

/ 여전히 비과세 감면은 정비되지 못하고 있음

- 폐지된 조세감면은 5개에 불과
 -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 의미 있는 감면 폐지 없음
- 대부분의 감면이 유지되거나 일부 변형되는 형태로 잔존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주요 현안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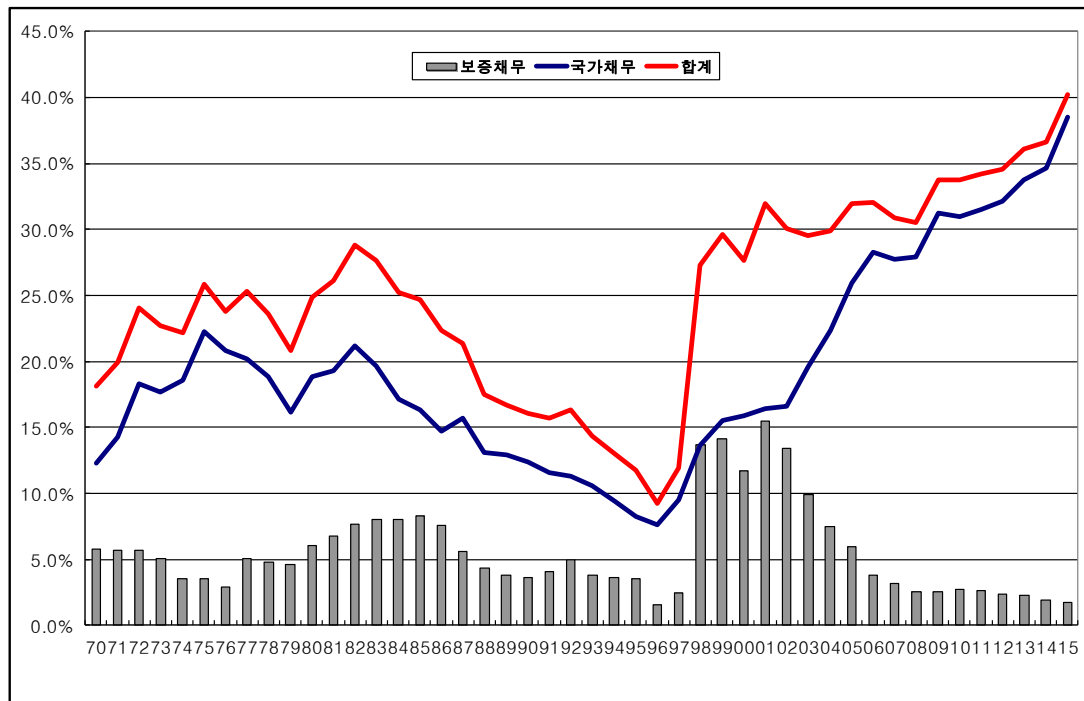
주요 현안

재정 적자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 하지만 정부 자원대책에는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자원만 있는 상태

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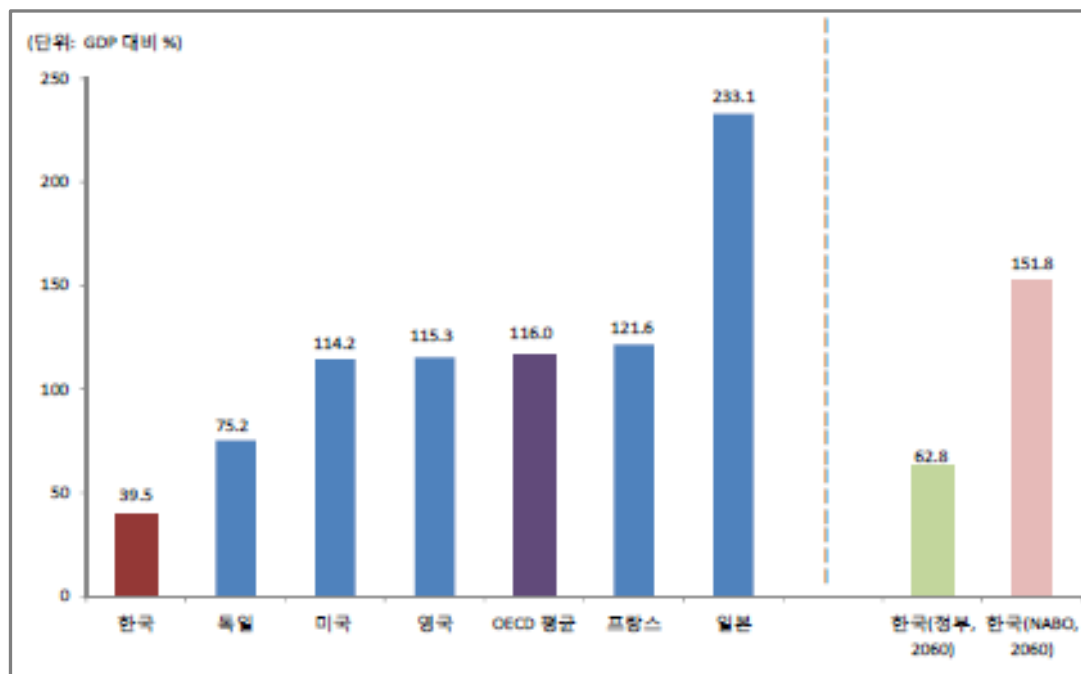
< 2017년 (예산기준)>

- 재정적자 규모 :
28.3조원 (GDP 대비 1.7%)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40.4%

우려되는 미래의 재정전망

- 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 증가
 - 206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151.8%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 2015년 10.5% → 2060년 21.1% 전망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2016년 전망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OECD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주요 현안

□ 낮은 조세부담률과 불공정한 조세 부담

/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그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

- 노인빈곤, 의료, 교육, 실업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선진국에 미달

	복지지출비율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France	31.0	42.8	26.8
Germany	26.2	35.2	21.6
Japan	20.4	27.6	16.9
Korea	8.6	23.4	18.2
Sweden	28.2	44.8	33.2
United Kingdom	21.9	33.5	27.3
United States	17.9	25.2	19.0
OECD - Total	21.0	33.6	24.9

불균등한 조세 부담

- 근로소득보다 유리한 자본소득 과세제도
 - 주식양도차익,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부분 많음
- 근로자 및 저소득자 위주로 조세 부담 강화
 - 전체 세수에 비해 소득세가 더 빠르게, 근로소득의 세수가 더 많이 증가
 - 담배소비세 증가

□ 증부담-증복지 논쟁

/ 정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는 상태

- 증복지 : 단순히 현재의 OECD 평균으로 설정
- 증부담 : 증복지를 달성하며 재정 불안정이 없는 수준으로 이해 가능

/ 개념적 문제점

- OECD 평균이 바람직한 이유 설명 불가능
 - 저복지 또는 고복지가 아닌 증복지여야 하는 이유 설명 어려움
- 추가되는 복지의 구성에 대한 설명 불가능
 - 복지 규모가 확대된다면 어떤 복지 항목도 가능하다는 의미

현실적인 중복지 개념

-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을 점진적 제고
 - 청년, 출산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심화 해소
- 추가적으로 심각한 복핵 위협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 재원도 필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면 사실상 중복지에 근접하는 수준 될 것

- 해당 복지 수준에 근접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이 관건
- 그렇지 못할 경우 공약이 후퇴 또는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

기본 방향

증세 규모

-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 차이 약 7%p
 -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시 매년 약 120조원
 - 일반적인 중부담이 의미하는 **증세규모는 달성 불가능**
 - 공약 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
- 현재기준 30 ~ 40조원(GDP 대비 1.5 ~ 2.5%) 수준의 증세가 적절한 규모
- 1년 평균 GDP 대비 조세 증가비율이 0.28% 이므로 現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려면 증가율을 매년 **GDP 대비 약 0.5%** (약 8.5조원) 증가시켜야 함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조세개편 방향

세목별 상황

-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세가 핵심적인 복지 재원**으로 출발
 - 이후 소득세 비중이 점차 감소,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
 - 법인세의 비중도 최근에 와서 감소
 - 부가세 이외 소비세 비중도 높음

GDP 대비 비중(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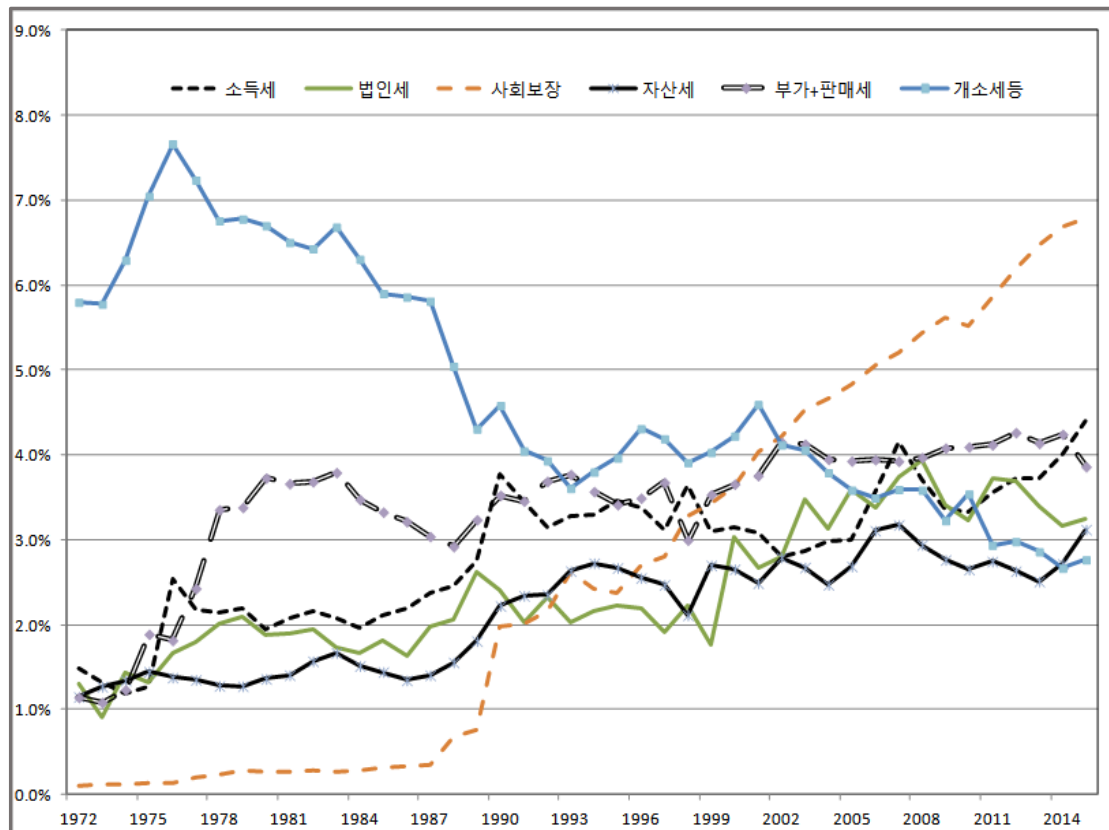
	1975	1985	1995	2000	2007	2014	KOR 2014	KOR 2015
개인소득세	9.0	9.8	9.1	9.1	8.8	8.4	4.0	4.4
법인소득세	2.1	2.5	2.7	3.3	3.6	2.8	3.2	3.2
사회보장기여금	6.4	7.3	8.8	8.6	8.5	9.1	6.6	6.7
급여세(Payroll taxes)	0.4	0.4	0.3	0.4	0.4	0.4	0.1	0.1
재산세	1.7	1.6	1.7	1.8	1.9	1.9	2.7	3.1
일반소비세	4.1	5.0	6.5	6.7	6.7	7.0	4.2	3.9
특별소비세	4.6	4.6	4.1	3.7	3.4	3.3	2.7	2.8
기타	0.3	0.3	0.4	0.6	0.8	0.2	0.7	0.6
합계	28.6	31.5	33.6	34.2	34.1	33.1	24.2	24.8

OECD, Revenue Statistics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조세개편 방향

GDP 대비 비중(단위 : %)



<우리나라>

-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빠르게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진적 증가하겠지만 급격한 증세 쉽지 않을 것
- 개별소비세 급격히 감소
 - 소비과세 부문은 어느정도 증세 여력이 있다는 것

- 단일 세목이나 부자 증세 방식만으로는 전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여러 세목이 일정한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 방향

우선 순위

- 우리나라 現상황에서 소비세가 우선되는 과세는 곤란
 - 선진국의 사례도 소득세가 우선되었음
 -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
- 1. 소득세 -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 2. 소비세 - 환경 에너지 부문, 부가가치세 면세 조정
- 3. 자산(재산)과세 - 부동산 관련 과세
- 4. 기타 - 비과세 및 감면 합리화, 세정 강화

세목별 - 소득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계속
 -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하는 안 가속화
 - 장기적으로는 보유 기준이 아닌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 거래세분과 손실분은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 비과세 축소
 - 분리과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
-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분리과세 방식 변경
 - 완납적 원천징수 → 선택적 원천징수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참 조

/ 소득의 구분

자본소득



혼합소득



노동소득



세목별 - 법인세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제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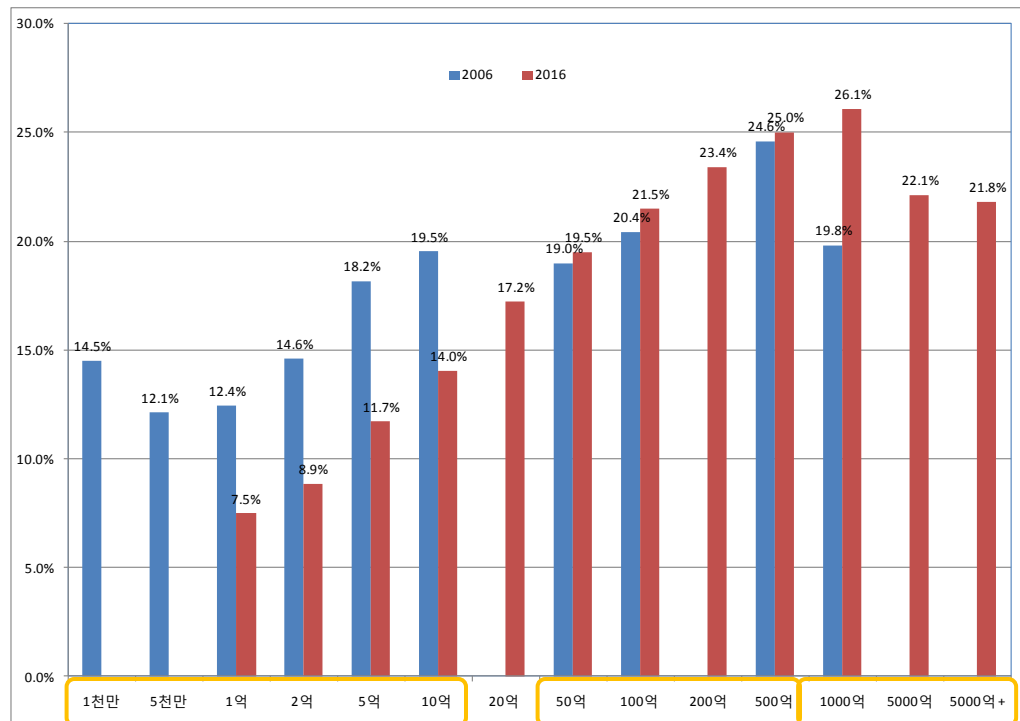
- 현재 4개의 세율이 존재
 - 투자 및 임금 증가에 따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영향으로 추가 과세되므로 실질세율은 더욱 복잡한 형태
 - 과세표준 2000억 이하 기업은 사실상 20 ~ 25% 세율 적용
- 200억 이상에 세율 25%를 적용하여 단순화 필요
 - 200억 이하도 20%로 단순화
 - 2억 미만 또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가 적합

02.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참 조

기업의 세 부담 변화

- 10년간의 법인세 개편으로 10억 이하 기업은 세 부담이 크게 감소
- - 50억 ~ 500억 사이의 기업은 소폭 증가
- - 500억 초과 기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



부담세액/당기순익 기준
부담세액은 조세감면 및 가산세 적용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임에 유의

법인 부담 완화

- 추가적인 부담인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
- 기업의 기부금 부담없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지원
 - 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폐지
 - . 미국은 기업 기부금 공제제도가 없음
 - . 정부 및 민간단체의 기부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등
 -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예외로 함

세목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 정부 관련 부문 과세를 점차적으로 확대
 - 올해 정부대행응역, 군 골프장 등 일부 과세
- 공교육을 제외한 교육 등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장기적으로는 이중세율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세율 인상

- 기본세율 현행유지(10%)
- 고소득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인상

세목별 - 개별소비세 등

발전부문 과세 강화

- 발전된 유연탄 추가적인 과세 필요
- 원전에 의한 발전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 필요

술, 담배, 유류 등 종량세에 종가세를 일부 적용

- 가격 상승을 일부 반영
 - 유형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술 등에 가격 요소 추가 감안

□ 세목별 - 상속증여 및 재산과세 등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복잡한 형태보다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 신규설립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금지하는 방법(공정거래 문제) 등
 - 특수관계자가 없던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가시키는 것도 신규 회사로 간주

/ 사업상속 지원제도 축소

- 과세 이연 방식으로 전환
 - 소규모 자영업만 허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아파트(80%), 고가주택(48%), 전세주택(65%), 상업건물(30%), 토지(42%)
-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신중히 접근**
 - 지역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보는 비누진적 재산세가 아닌
대규모 부동산 재산 보유에 대한 부유세 성격의 추가과세
 - 금융자산을 제외한 부동산에 국한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부유세와 차이
 -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보다는 양도차익,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세목별 - 기타

조세감면

-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과감하게 폐지
 - 일몰이 설정된 이후에 3번째 일몰이 돌아온 조세특례는 무조건 폐지
 - 본 법에 이전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



Thank you

Powerpoint is a complete presentation graphic package it gives you everything
you need to produce a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